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복지 공약 진단과 불평등 해소 대안

2021. 12. 29.

오 건 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mrokh@naver.com



목 차

1. 현행 소득보장체계
2. 이재명: 보편적 소액기본소득
3. 윤석열: 촘촘한 사회안전망
4. 심상정: 시민최저소득
5. 정리

1. 후보별 소득보장 공약

<이재명>

- 보편적 기본소득: 연 100만원 (청년 연 200만원)

<윤석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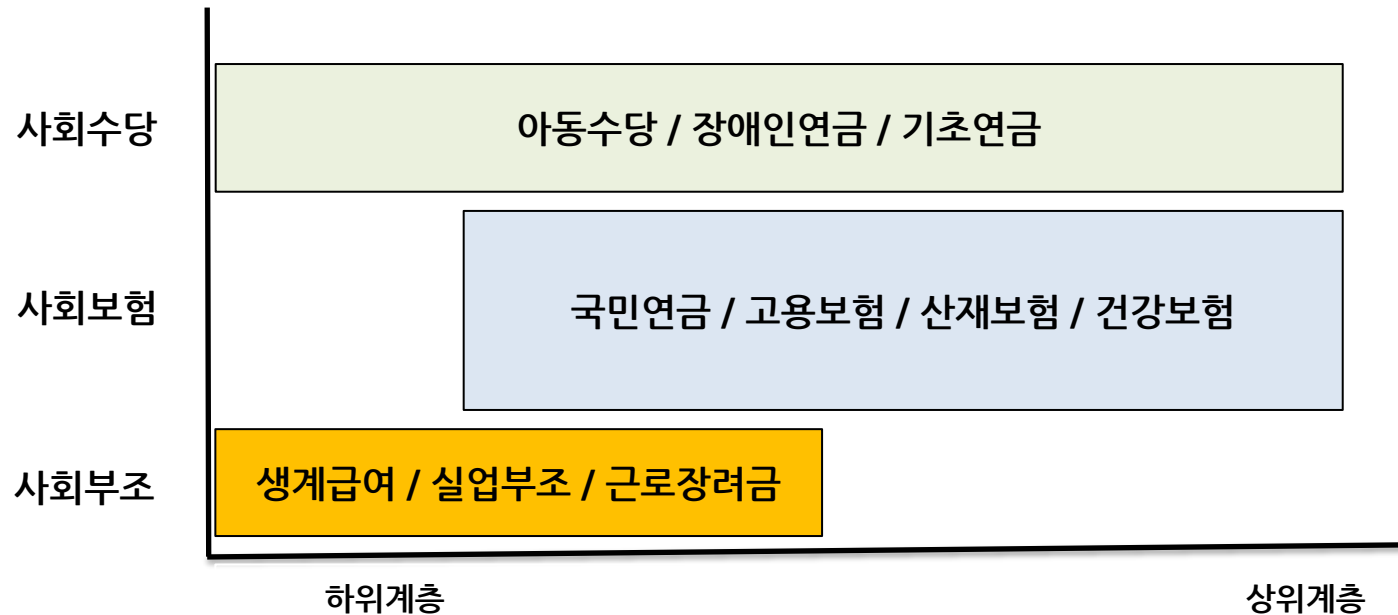
- 촘촘한 사회안전망: 생계급여, 근로장려금, 긴급복지지원 강화

<심상정>

- 시민평생소득: 시민최저소득, 전국민소득보장, 범주형 기본소득

현행 소득보장체계

2. 현재 소득보장



- 사회수당(연령집단): 비경제활동인구 연령집단에 대한 사회적 부양
- 사회보험(실업자/은퇴자 등):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보장
- 사회부조(저소득층): 일정 소득 이하 시민에 대한 소득지원

3. 소득보장의 핵심 문제: 사각지대

<배제>

- 구조: 노동시장 불안정구조와 소득보장제도의 부정합 (사회보험)
-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및 과도한 재산소득환산 등 (공공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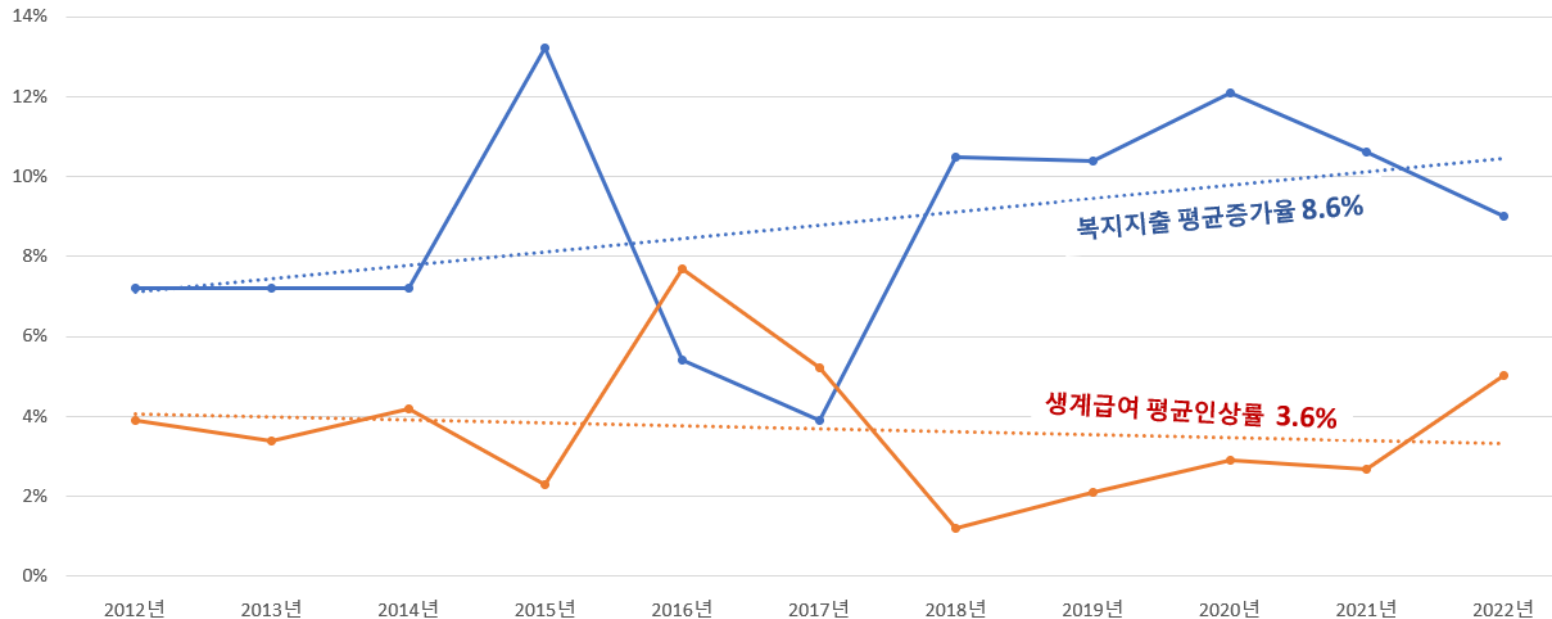
<불충분>

- 공공부조의 낮은 위상: 저소득층 소득보장의 주변화
- 엄격한 제도 설계: 부양의무자 기준, 과도한 재산소득환산 등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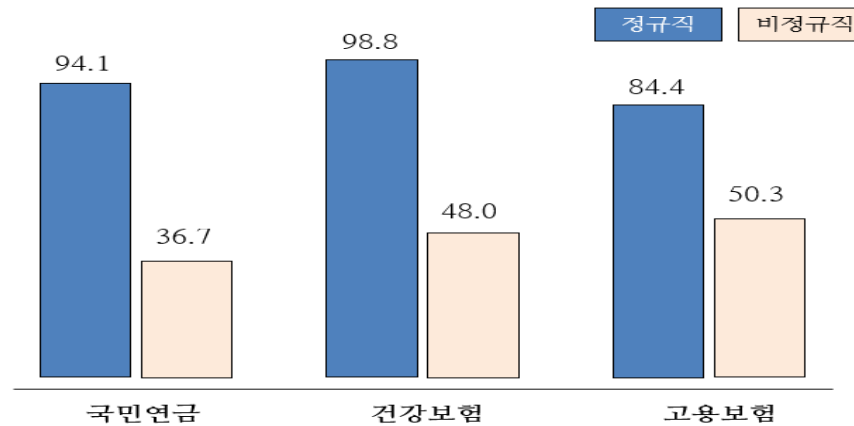
- 포괄성: 소득지원 대상을 모두 포괄
- 급여적정성: 인간적 최소 삶을 위한 기초보장

4. 사회부조: 기초생활보장 빈약



- 포괄성: 상대적 빈곤율 16.3%. 생계급여 수급자는 153만명, 인구 3%.
- 급여적정성: 2011~2022년 4인가구 평균 인상률은 **3.6%**, 복지분야 증가율 **8.6%**
(문재인정부 생계급여 평균인상률 2.8%, 복지분야 증가율 10.5%).

5. 사회보험: 비정규직 배제 (2021)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국민연금	32.5	33.0	33.8	35.5	36.7
건강보험	40.8	41.9	43.3	45.9	48.0
고용보험	40.2	40.0	40.2	43.1	50.3

- 고용 기반 사회보험: 비정규직 절반 이상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 부분 개혁: 두루누리, 가입 확대 등 일부 개선되나 구조적 한계

6. 사회수당: 돌봄, 참여활동 미지원

구 분		unpaid / paid							
		무급노동 (unpaid)	불완전 시장노동 (underpaid)				유급 시장노동 (paid)		
formal / informal	공식 (formal)	무급 자원봉사	유급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사회적 일자리 (자활, 노 인, 장애 인, 비시장 일자리)	사회적 기업	자영업자	피용자	고용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공동경제 (communal economy)				시장경제 (market economy)			
	비공식 (informal)	가정노동 제공자: 가사노동, 가족돌봄	가족 종사자				사적 고용 종사자		
	가정경제 (domestic economy)		숨겨진 경제 (hidden economy)						

- 출처: 석재은(2021), "사회적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대가는 어떻게 지불할까", 허재준 외 [노동시장의 변화, 일의 미래와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근간.

- 가족·지역 돌봄, 사회적 공익활동 등 대부분 미보상
- 사회적기업, 노인일자리 등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확대 필요

7. 소득보장 목표: 포괄성과 급여적정성

<사각지대 원인>

- 저소득층: 엄격한 기준과 낮은 급여 수준
- 실업자·은퇴자: 노동시장의 불안정구조와 고용 기반 사회보험의 부정합
- 연령·역할집단: 사회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나 지원 제도 부재

<목표: 포괄성과 급여적정성>

- 사각지대를 해소하고(포괄성), 급여 수준을 실질화해야(급여적정성)

<대안>

- 사회수당: 확대 강화 (돌봄수당, 참여소득, 농민기본소득, 범주형 기본소득 등)
- 사회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소득기반 사회보험
- 사회부조: 기본소득 vs 현행체계 강화 vs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보편적 소액기본소득 (이재명)

8. 기본소득의 4가지 유형

<완전 기본소득>

- 스위스 국민투표: 월 300만원(상시 평균노동자 1/3 수준). 한국 100만원.
☞ 재원 과제 600조원 소요

<부분(소액) 기본소득>

- 한국 기본소득진영: 월 10~30만원 ☞ 적절성, 효용성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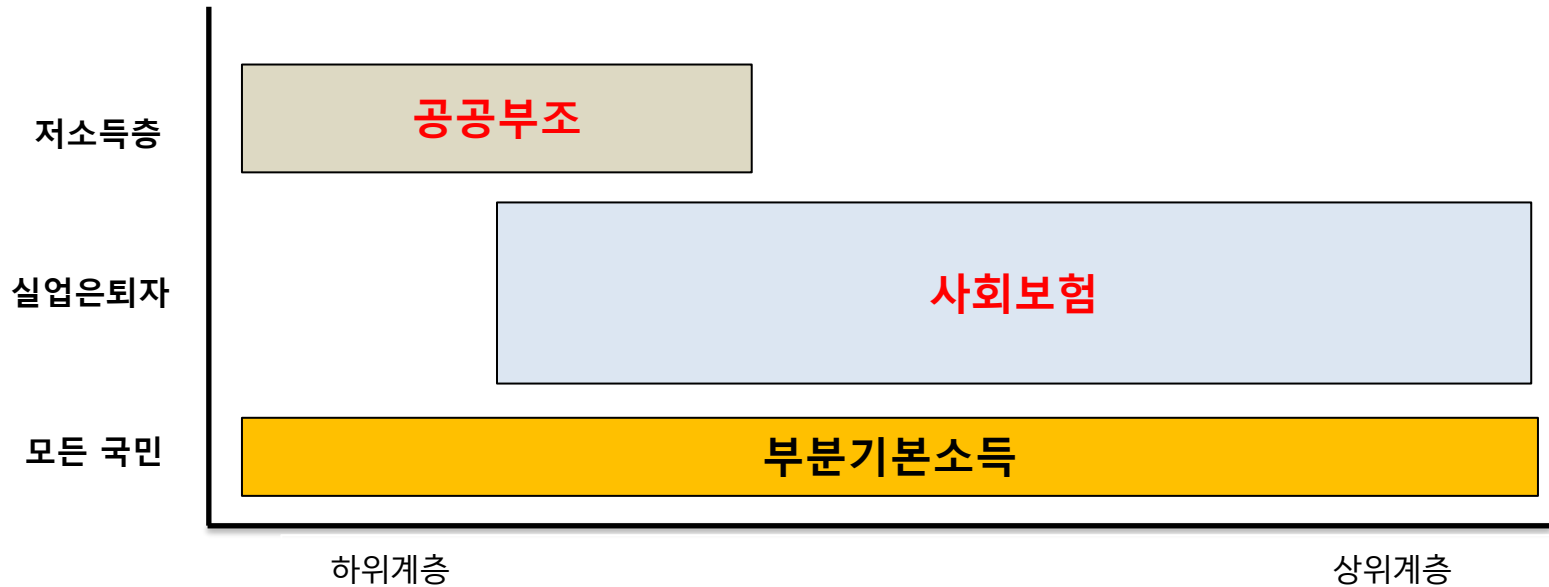
<사회수당형(범주형) 기본소득>

- 연령별: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 역할별: 돌봄수당, 공익수당, 참여소득 등 ☞ 필요기반 사회수당과 동일

<사회부조혁신형 기본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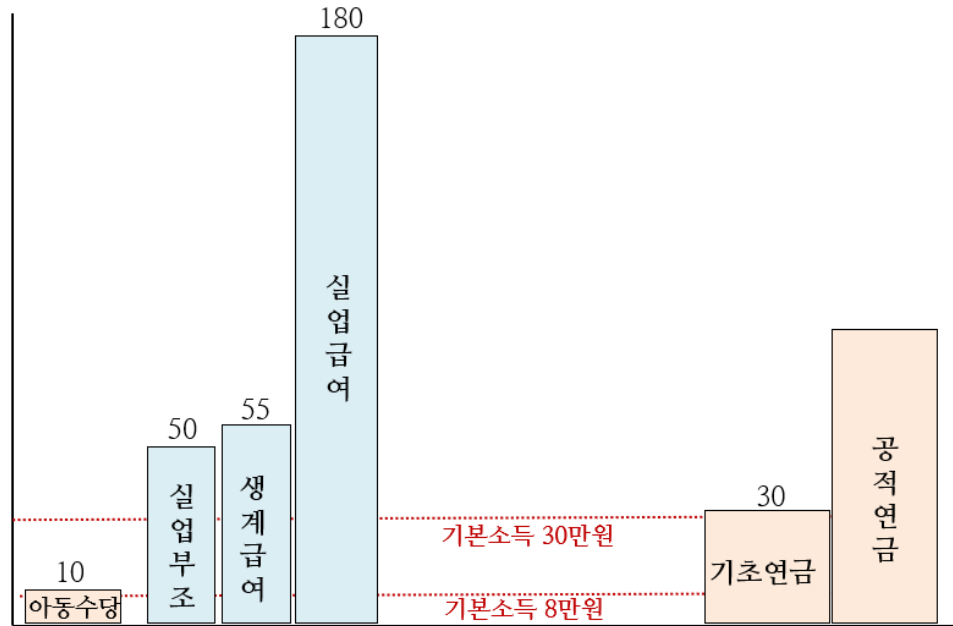
- 저개발국가: 취약마을 주민 지원 . ☞ 빈곤구제 정책
- 핀란드: 2년 2천명, 월 70만원. 근로동기 실험. ☞ 실업부조 혁신안
- 캐나다 온타리오주: 3년 4천명, 월 120만원. 절반 공제. ☞ 공공부조 혁신안

9. 논의 대상: 소액기본소득 (혼합복지)



-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공존하는 혼합복지체제

10. 소액기본소득의 효용성



- 포괄성과 급여적정성?: 형식적으로 모두를 포괄하나 저소득층에 적정소득 보장 못함
- 재분배?: 조세기반 현금복지 중 최소 재분배 효과. 불평등체제에서 유효한가?
- 공유부?: 토지, 지식, 빅데이터 등. 자산의 물리적 성격보다는 계층성이 핵심. 시장불평 등 재생산하는 자산이라면 불평등 개선에 적극 사용되어야.

👉 사각지대 없이 저소득층에 적절한 급여를 제공할 비교우위 대안 필요.

11. 기본소득 평가

<평가>

- **강점:** 현행 소득보장체제를 비판하며 소득보장 논의 추동
- **약점:** 최소 재분배 효과를 지닌 제도여서 효용성 논란

<활용>

- **범주형 기본소득:** 농민수당, 돌봄수당 등 적극 도입 필요
- **교정과세 기본소득:** 국토배당(국토보유세), 탄소배당(탄소세)
부가세배당(부가가치세 인상) 등 전향적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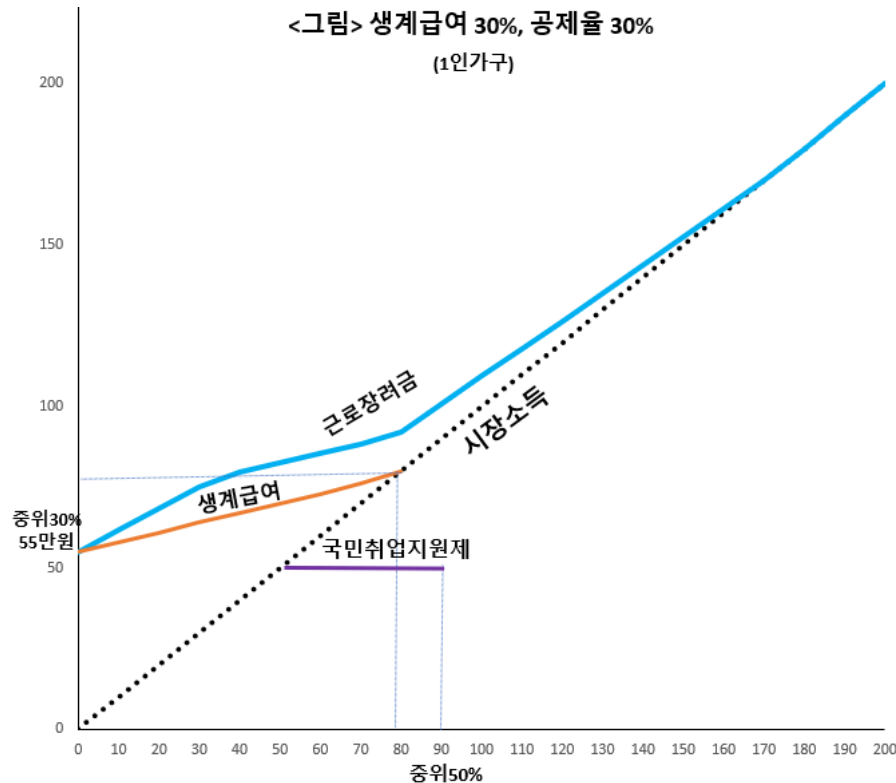
<제안: '필요' 기반 소득보장>

- **대안:** 모두를 포괄하면서 적정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모색.
- **원리:** '필요' 기반 '사각지대' 없는 '적정' 보장 대안 찾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윤석열)

12. 현행 사회부조: 생계급여, 근로장려금, 실업부조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5만원(소득공제 30%로 78만원까지 수급), 광범위한 사각지대(재산소득환산 등) 존재.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소득 2000만원. 최대 150만원 지원. 보조적 역할.
-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중위소득 60%, 6개월 50만원 (빈약한 보장)

13. 촘촘한 사회안전망

<취약계층 삶 국가 책임>

- 기본 방향: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지원
- 생계급여 확대: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추가급여
- 약점: 최소 재분배 효과를 지닌 제도여서 효용성 논란

<일하는 사람 소득 지원>

- 근로장려금: 소득(2천~3600만원), 재산(2억원) 요건 완화
급여(150~300만원) 개선
- 생계급여 소득공제: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긴급복지제도 강화>

-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취약계층에서 대상 확대

14. 촘촘한 사회안전망 평가

<포괄성>

- 생계급여 확대: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추가급여
 - 근로장려금: 요건 완화로 대상 확대
 -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
- > 구체적 확대 기준을 발표하지 않음.

<급여적정성>

- 생계급여: 공제 확대로 일부 상향
 - 근로장려금: 확대 수준 언급 없음
- > 구체적 확대 수준을 발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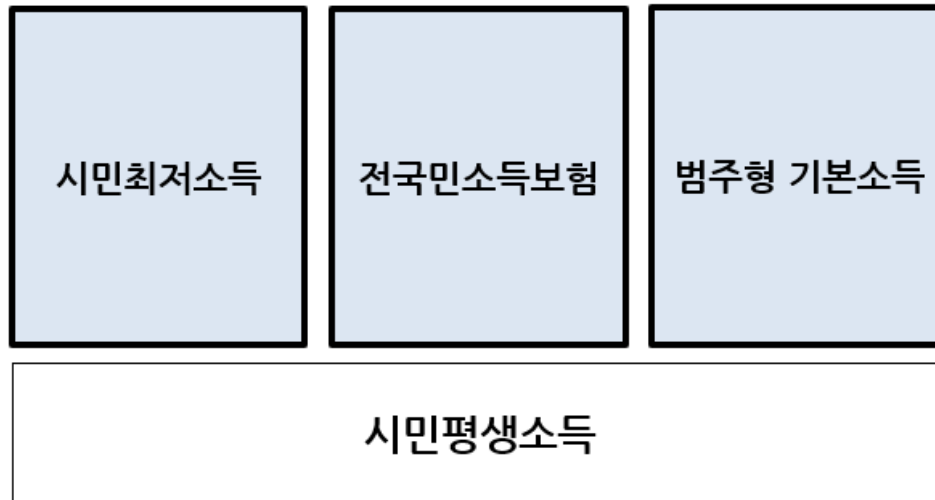
<평가>

- 제도 복잡성 유지: 기존 틀 기반 but '소득공제 50%'는 주목 필요!
- 사각지대 개선: 구체적 수치 없으나 기존틀에서 대폭 강화 한계

시민최저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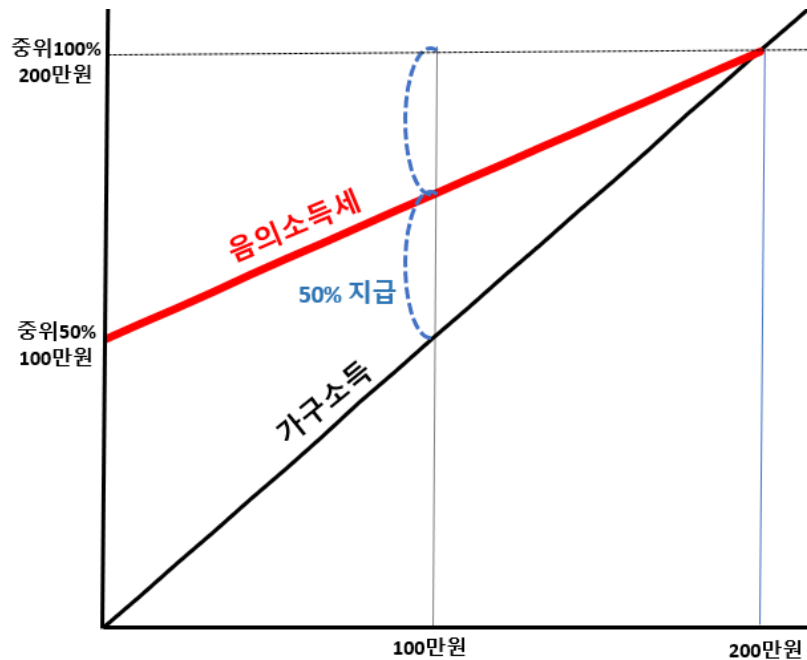
(심상정)

15. 시민평생소득: 필요 기반 소득보장망



-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을 사회적 가치 활동 등을 지원하는 포괄적 수당으로 확장
- 전국민 소득보험: 소득기반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험으로 전환
- 시민최저소득: 지원 대상과 금액을 강화한 '진보적' 음의소득세

16. 음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 원리: 현행 기준소득 이하 부족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
- 지급률: 표준모델 50%, 높을수록 보장성 강화, 낮을 수록 근로동기 강화.

17. 시민최저소득 평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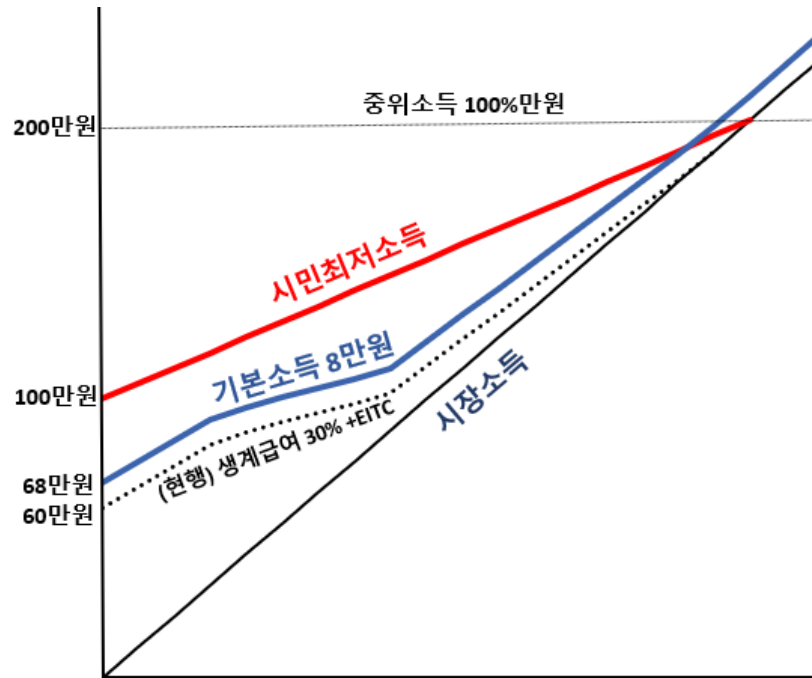
- 시민소득 사회안전망: 촘촘한 소득파악을 토대로 대상과 급여를 획기적으로 확장.
- 진영 넘는 대안: 보수적 의제로 여겨지는 '음의소득세'를 '복지확장형'으로 활용.
- 통합 단순화: 중복 성격의 저소득층 소득보장을 통합.

<과제>

- 근로동기 독려: 음의소득세를 둘러싼 기본 논점
- 재정 방안: 약 50조원 소요

정 리

18. 비교: 소득보장 대안들



- 시민최저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소득보장 강화
-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동일액 혜택
- 소요재정: 시민최저소득 약 40~50조원 vs 기본소득 약 50조원

19. 향후 과제

<실질 토론>

- 구체적 방안과 소득보장 효과 검증 토론

<실시간 소득파악>

- 급여적정성과 형평성 위해 국가 전략 과제로 추진해야.

<국가재정 확충>

- 모든 대안은 조세 재정 확충 필요

고맙습니다.

